

순천시 ‘2037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나섰다

李 대통령 대선 공약...경남 포함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 등 구상
전담팀 구성...개최지 결정되는 2032년까지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

순천시가 2037년 세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나섰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대선 공약인 유니버시아드 유치 실현을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체육시설 구축·홍보 등 3단계 유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회를 여수·광양 등 전남 인접 시는 물론 경남 일부지역을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 시·군이 공동 유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시는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는 2032년까지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1단계(2025~2028년)에선 대회유치전략 TF 구성, 공동유치 지역별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2029~2031년)는 체육시설 구축 완료, 대회유치 추진단 및 공동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3단계(2030~2032년)는 업무협약의 및 홍보, 정부 승인 및 신청, 유치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회유치 TF는 순천시체육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구성할 방침이며, 2031년까지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순천시는 2031년 정부 심의 승인을 거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2032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개최지도 큰 관심이다.

대선공약에는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 공동 개최 방안이 제시됐으나, 순천시는 경남 일부지역을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확대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인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 전남 5개 시·군과 진주·사천시, 남해·하동군 등 경남 4개 시·군이 대상으로 떠오른다.

이들 시·군에 공식 제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 개최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최 희망 지역에 결정되면 2030년 공동유치단을 구성해 중합계획을 세우고, 공동 유치위원회와 사무국을 꾸릴 계획이다.

유니버시아드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으로 2년마다 열린다. 국내에서는 대구(2003년)·광주(2915년)에서 개최됐으며, 오는 2027년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열리게 된다. 대부분 개최지는 대회 개막 5년 전에 결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회 유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은 TF 구성 이후 수립될 것”이라면서 “최종 유치를 목표로 전남도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금남지하상가에서 물감놀이 신나요”

16일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일대의 조성된 디지털 미디어아트와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인 ‘빛나는 아이나라’에서 어린이들이 물감놀이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시, 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알고도 7년간 ‘나몰라라’

2018년 보도자료 발간해 책임 인정...최근 추가 조사엔 “자치구 책임”

‘산단 지하수 1급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 지자체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가 수년전 사실상 지하수처리 책임을 인정하는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8월 8일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2353곳의 지하수 오염현황을 분석한 결과, 157곳이 부적합으로 판명됐다”면서 “특정유해물질 중 에틸렌게인 TCE, PCE는 주로 전자부품, 1차금속산업 제조과정에서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산단지역 초과지점을 조사하고 주변지역까지 확대 조사와 시·구·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한 후 부적합한 지점의 이용종지·정수시설 설치 등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주변 특정오염물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각 전문가 집단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수·토양오염 원인을 조사한 후 오염정화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확산방지에 주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지하수법 상 지하수 오염에 따른 시정·오염방지 명령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지만, 광역지자체장도 지하수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자료로 해석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산단이 위치해 있는 광산구와 북구에 추가 조사를 위한 용역예산을 교부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북구는 해당 용역결과를 정식공문으로 보고하고 정화예산 54억원 교부를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절했다.

광산구의 경우 하남산단 용역결과 보고서 광주시에 제출은 했지만, 조치계획 등이 담긴 정식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광산구에 책임이 있고 시는 소극적 행정의 안타까움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산구 산업단지 지하수 오염 대책위(가칭)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시민 앞에 나와 사죄하고,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주시는 행정조직 권한이 광산구에 있다며 발암물질 오염 지하수의 사용 중지,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한 사안에서 ‘소관 사무’ 운운하며 행정을 회피한 광주시의 태도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무책임한 무능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광산구에 대해서는 “광산구청은 2년 넘도록 어떤 행정명령도 내리지 않았으며, 정화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생명권을 철저히 외면한 무기력한 자치행정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하남·본촌산단 지하수 오염에 대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 하남산단과 북구 본촌산단에서는 최근 1급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됐지만 수년 동안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착착’

117만 3000명 18만원~55만원...1개월내 90% 지급 목표

전남지역 177만 3000명에게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전남도는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소비기간’으로 정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현장 중심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177만 3000명으로 상위 소득 10%(5만3000명), 차상위·한부모가족 2만5000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3000명과 나머지 일반 158만 2000명이다. 지급은 1·2차로 나눠 1차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2차에서는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다. 비수도권 지역이라 5개 시와 무안군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오프라인의 경우 시·군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전남도는 특히 1개월 이내 전체 도민의 90%에게 민생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서비스’를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추진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324개 읍·면·동, 8789개 마을과 448개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등 민생쿠폰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민생쿠폰 전담 TF를 구성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 확보 ▲읍면동 민원대응 보조인력 확보, 콜센터 운영 ▲사용처 홍보·안내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생쿠폰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전진을 꼼꼼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대통령실 찾아 ‘현안 챙기기’

우상호 수석 등 심층면담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일 대통령실을 찾고 있다.

김 지사는 16일 대통령실을 찾아 우상호 정무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잇따라 심층면담을 갖고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여수(남해안·남중권) 유치’ 등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에도 대통령실을 찾아 강준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을 밝히고 국가불균형 개선을 위한 현안들을 건의했었다.

전남도는 당시 목포·영암·해남·무안 등 서남권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특화산단,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해상풍력 클러스터 등을 구축해 인구 50만 규모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실의 ‘RE100 산업단지 정책’과 관련,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전남 서남권을 RE100 특화산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198개국에 참여하는 ‘2028년 유엔기후 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여수 유치’와 관련, 국정과제 반영도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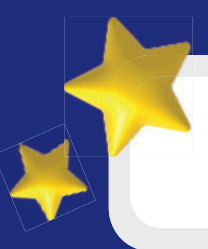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